

한일 경제 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정오영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경제 협력에 대한 양국 입장의 괴리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추진된 한일 경제 협력은 對韓 직접 투자와 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산업화 초기에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본의 對韓 투자·기술 이전은 한편으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양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경제 협력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해, 그 동기와 성과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양국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표〉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양국의 입장

| 구분 | 한국측 | 일본측 |
|-------|--|---|
| 동기 | 국산화, 수입 대체, 수출 산업화 | 현지 시장 확대, 저임금 메리트를 이용한 저부가 가치 제품 생산·수입 |
| 협력 형태 | 합작, 기술 도입 선호 | 단독 투자, OEM, 단순 수입 선호 |
| 도입 기술 | 저급 기술이며 국내 파급 효과 적음. | 기술료가 너무 낮음(한국측은 생산 공정 개선 기술을 경시하는 반면, 수용 능력이 미비한 첨단 기술에 집착함). |
| 성과 | 산업 구조 고도화, 對日 무역 역조 개선에 미흡 | 한국의 무역 증대, 고용 창출, 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 |
| 투자 환경 | 금리, 세제 지원 등의 면에서는 경쟁국에 뒤지나 생산 능력 및 부품 조달 능력은 우위에 있음. | 중소기업 기반 취약, 기술 수준 저위, 노사 분규 심화, 저임금 메리트의 소멸 |

먼저, 경제 협력의 동기 면에서 우리나라는 합작 투자를 통한 수입 대체, 기술 도입을 통한 자체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주로 수출 시장 확보, 저임금 메리트를 이용한 생산비 절감형의 저급 기술, 저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투자 및 기술 이전에 한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경제 협력에 대한 평가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한일 경제 협력이 무역 증대, 자본 축적, 고용 창출 등을 통하여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협력의 국민 경제적 효과는 초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산업 구조 고도화 및 對日 무역 역조 개선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본의 對韓 직접 투자가 한국의 무역 증대에 오히려 크게 기여한 사실을 강조해왔다. 특히, 일본측은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한국의 對日 의존적인 산업 구조와 이로 인한 對日 수입 확대의 필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 협력 추진 상의 문제점

상술한 바와 같이, 한일간에는 한국의 對日 무역 적자 확대, 일본 기술 도입의 감소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견해 차이와 마찰이 있어왔다. 그러므로 한일간 경제 교류는 최근 수년간 무역, 투자, 기술 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일 경제 교류 축소 현상은 90년대에 들어 계속된 양국의 국내 경기 부진에도 원인이 있으나, 보다 큰 배경에는 양국간 경제 협력 추진에 있어서 구조적이며 만성적인 저해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한일간의 활발한 경제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추진 방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1) 미흡한 산업 구조 고도화 협력

양국의 경제 협력 내용에 있어서, 일본의 對韓 투자는 대부분 생산비 절감형의 저가·저부가가치 제품품에 한정되고, 단순 생산 기지 또는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치중하고 있어 우리의 산업 구조 고도화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일본의 對韓 기술 이전도 우리의 공업화 초기에는 기술 수준 향상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은 대부분 값싼 단순 가공 조립 기술에 한정됨으로써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체제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술의 '對日 종속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OEM, 부품 수입 등에 있어서도, 일본은 우리를 국제 하청 생산 기지로 인식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공무역생산체제의 산업 구조는 개선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 무역과의 연계 부족

한일간의 경제 협력은 우리에게서 국산화, 수입 대체,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의 전반적인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對日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경제체제 내에서 양국간에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지만, 一國이 상대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무역 관계 수립이나 적자국의 산업 구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對韓 직접 투자와 기술 이전이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과 무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對日 무역 역조가 조속히 시정되도록 양국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 노력없이 경제 협력을 지속한다면 이는 우리의 국민 경제 발전에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우리의 흡수 능력 부족

과거 국내 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 외국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가공 조립형 산업을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했던 우리의 산업 정책 결과 가공 조립 단계의 산업은 구조적 취약화를 초래하였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시설 투자는 주로 외국산 기계에 의해 충당됨으로써 중요한 설비 기계의 국내 개발 및 생산이 위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산업 설비 및 기계류의 국산화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산화율이 저조하고,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하면 이는 그대로 도입 자본 기술의 흡수 능력 저하로 연결되는 것이며, 일본 기술 모방과 확산 속도의 저조, 나아가 기술의 '대일 종속화'라는 산업 기술 정책 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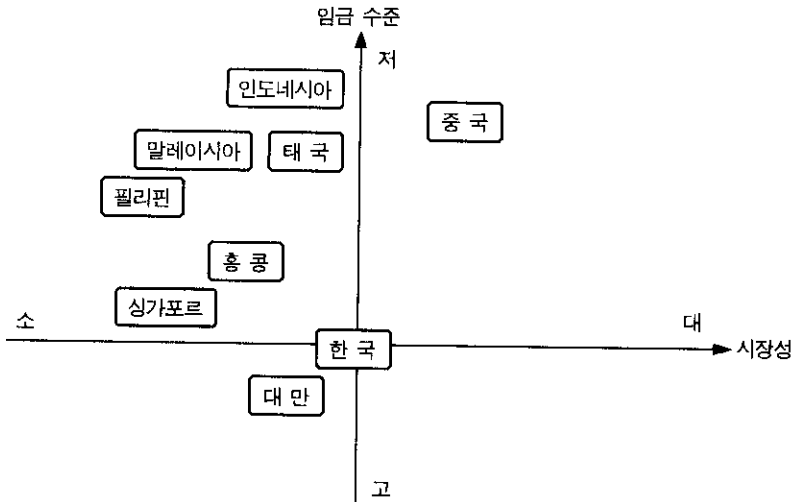
4) 투자 환경의 상대적 열위

최근 일본 기업들은 對아시아 투자에 있어서 생산 공정 관리 능력, 현지 부품 조달 능력 등과 같은 새로운 투자 환경 요인을 점차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자 유치 정책, 임금 수준 등 전통적 투자 환경 요인은 對日 투자 유치에 주요한 변수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자 유치 정책, 임금 수준 등의 면에서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에서 기업 진출의 코스트 메리트인 임금 수준과 시장성의 관계를 보면, 한국은 중국이나 ASEAN보다 코스트 메리트가 낮고 시장성은 중국보다 열위에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 기업에게는 코스트 메리트도 높고 현재 이미 한국이나 ASEAN보다 큰 시장

〈그림〉 임금 수준과 시장성으로 본 아시아 각국의 투자 환경



자료: 산업연구원, 「KIET 實物經濟」, 1994. 8.

을 갖고 있으며, 장래에 높은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이 오히려 진출국으로서의 가장 큰 매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일본의 소극적 자세

한일 경제 협력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우리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의 산업 정책이 對日 의존적 가공 무역 산업 구조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든지, 기술 수준의 저위, 중소기업 기반 취약, 對日 정보 부족 등 우리 스스로 무수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일본은 소위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여 첨단 기술의 이전을 꺼렸으며, 또한 국내적으로는 산업 공동화를 우려해 제조업의 해외 투자 이전을 망설였다. 즉, 일본은 생산 기술의 해외 이전, 해외 부품 조달 등 국제적 산업 구조 조정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것이다.

향후 추진 방안

한일 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나타난 부정적 효과 또는 폐해 요인은 무엇보다도 산업 구조 고도화 지연, 수직 분업, 對日 무역 역조 심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산업 구조 합리화·고도화, 수평 분업, 무역 균형 달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한일 경제 협력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된다.

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인 한일 경제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흡수 능력이 제고되어야 하며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가 불가결하다고 말할 수 있다.

1) 상호주의 원칙 견지

한일 경제 협력은 양국에 공동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호주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서는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협력의 동기, 성과, 협력 형태, 도입 기술 수준, 투자 환경 등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양국간의 인식 상의 차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한일 경제 협력의 내실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상호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인식 상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측은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해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 입장에서 민간 협력의 구체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면서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한일간 산업내 분업이 수직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려, 이의 시정을 위한 방안으로 수평적 산업 협력이 행해지도록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기업의 능동적 대응

한일 경제 협력의 효과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협력의 주체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기업들이 도입의 편리성때문에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무리하게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한다든가, 기술을 一括적으로 도입하려 한다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그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은 경제 협력의 주체임을 인식, 한일 경제 협력을 통해 對日 기술 종속을 탈피하고 수평 분업, 산업 구조 고도화, 무역 균형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 달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3) 부품·소재 산업의 기반 구축과 기술 개발 투자 확대

한일 경제 협력은 산업 구조와 조직 상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보다는 오히려 구조적 모순을 고착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 협력의 효과가 반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품 생산 기반이 약했으므로 가공 무역형의 경제 구조가 잉태되고 산업 구조를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존케 하여 한일간 수직적 공장간 분업체제를 초래하였으며,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기반 부재는 한일 경제 협력의 성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품, 소재 등을 생산하는 중견·중소기업 육성이 수평적 차원에서 한일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첨경임을 인식하고, 관련 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이 이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분야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장기 저리 융자 형태의 지원책이 확대·실시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맺음말

최근까지 한일간의 경제 협력은 施惠者와 受惠者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양국간의 분업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 확대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對日 무역 역조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對日 무역 역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일 경제 협력과 對日 수출이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부문도 다분히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한일 경제 협력에 있어 자본, 기술 이전이라는 단순한 협력에 그치지 말고 이것이 對日 수출과 직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흡수 능력 제고가 선결 과제이며, 이러한 흡수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기술 개발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기술 개발 투자에 있어서도 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부문이 있듯이 기업이 담당할 부문도 있다. 정부의 기술 개발 투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개발 기술의 이용자가 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기업 자체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흡수 능력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